

## 세월호 사건 보도의 피해자 비난 경향 연구:

보수 종편 채널 뉴스의 피해자 범주화 및 단어 네트워크 프레임 분석 \*

홍주현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조교수)

나은경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조교수)

이 연구는 사건·사고의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현상에 주목하고, 언론이 세월호 피해자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밝히기 위해 어절 분석·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수 종편이 피해자를 어떻게 틀 짓는지 프레임 분석을 했다. 의견 표출 정도와 행위의 합법성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유형화했고 피해자 유형에 따라 언론의 프레임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했다. '일탈적 행동을 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반정부 세력 프레임, 집회 불법성 강조 프레임, 갈등 불법성 강조 프레임, 유가족 폭행 강조 프레임이 형성되었고, '합법적 지각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순수 희생자 강조 프레임, 특별법 수용 프레임, 유가족 차별화 프레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언론의 피해자 보도에 피해자 위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뉴스 가치 측면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보았고 피해자 행위의 특성에 따라 언론 보도 프레임이 어떻게 다른지 규명했다. 보수 종편이 사건의 피해자를 보도할 때 피해자 위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증적으로 밝히고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프레임의 차이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사건 보도, 사건 피해자, 피해자 위계, 프레임, 네트워크 분석

---

\* 논문을 꼼꼼하고 날카롭게 심사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joohssy@kookmin.ac.kr, 주저자

\*\*\* eunniena@kookmin.ac.kr, 교신 저자

## 1. 문제 제기

세월호 사건을 조롱하는 표현의 게시글을 올렸던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가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sup>1)</sup>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 4월 17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이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과 비난을 받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sup>2)</sup> 세월호 유가족의 시위가 장기화되고 대리기사 폭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의견이 엇갈린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유가족의 청와대 앞 시위, 촛불집회 참가, 광화문 광장 단식 농성 등 피해자들이 정치 세력화되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나타났다. 진보 단체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단식에 동참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피해자인 이들이 비난받고 부정적 집단으로 인식된 것이다.

사건의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현상을 두고 심리학에서는 “피해자 비난”(victim blaming)이라고 한다(Greer, 2007; Watt, 2007). 피해자 비난 현상은 특히, 성범죄 사건의 희생자를 향해 쉽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주로 언론에 의해 형성된다(Altheide, Gray, Janisch, Korbin, Maratea, Neill, Reaves, & Deman, 2001; Conaway, 2007). 코나웨이(Conaway, 2007)는 뉴스나 TV쇼에서 성폭력 희생자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결점을 부각시키거나 성폭력을 당할 만한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매체가 피해자를 비난받을 만한 인물로 묘사한다고 했다. 페어바이언, 비번스, 그리고 도슨(Fairbairn, Bivens, & Dawson, 2013)은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다 쉽게 표출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난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한다. 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귀인할 경우 피해자는 더욱 비난받기 쉽다. 개인 간 폭력 사건에 비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사건의 경우, 재난 자체의 선정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는 언론 보도는 선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 준칙과도 같다. 특히, 사건사고 및 재난 보도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방식은 관찰자로 하여금 연민과 슬픔, 공포와 분노의 감정 반응을 쉽게 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김성재, 2003; 윤태진, 2014).

1) <동아일보>, (2015, 7, 3). “‘일베’ 소방공무원, 임용 포기… 세월호 유가족 가슴에 또 상처”.

URL: <http://news.donga.com/DKBNEWS/3/all/20150703/72260813/3>

2) <뉴시스> (2015, 6, 17). “세월호 희생자 ‘특대 어묵’ 모욕 20대, 법정서 뒤늦은 반성”.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론의 보도 프레임은 다양하다. 사건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기도 하고 사건의 결과 중심으로 보도하거나 사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기도 한다(Entmann, 2007). 사건에 대해 언론이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사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Grunic, 2005).

이 연구는 세월호 참사를 포함해 사회에서 사건의 피해자가 동정보다 비난을 받는 현상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언론의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서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언론이 세월호 유가족을 어떻게 프레임하는지에 주목했다. 언론은 모든 피해자를 동일하게 다루지 않는다. 피해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백인일 경우, 연령이 젊을수록 더 동정심을 나타내는 등 피해자의 지위나 성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다른 태도를 나타내는데 이를 “피해자 위계”(hierarchy of victim)라고 한다(Altheide et al., 2001). 이 연구는 피해자에 관한 언론 보도에 피해자 위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특정한 방식의 피해자 위계를 통해 언론이 이들을 어떻게 다르게 틀 짓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목하여 세월호 유가족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 언론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규명하고 그 원인을 피해자의 행동과 뉴스 가치 측면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 연구는 사고 희생자의 성격에 따라 언론이 이들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대하는지 프레임 분석을 통해 밝힘으로써 언론의 희생자 보도에 피해자 위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고 바람직한 피해자 보도의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사건·사고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 언론이 이들을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피해자 위계가 언론의 사건 보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살펴보고 뉴스 가치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행동에 따라 언론이 피해자를 어떻게 틀 짓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1)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 피해자 비난

피해자학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동정받는 피해자와 동정받지 못하는 피해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피해자와 침묵하는 피해자로 구분하면서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 ‘피해자 위계’(hierarchy of victimization)가 존재한다고 한다(Altheide et al., 2001; Greer, 2007). 천재지변이나 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계층과 같은 배경이나 성별, 연령, 인종 등 생물학적 요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 위계이다. 피해자 위계로 인해 동정받아야 할 피해자가 때로는 잊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아 영웅이 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이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범죄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부 귀인하기 때문이다(Greer, 2007).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성범죄를 당할 만한 이유를 피해자가 제공했다고 귀인함으로써 동정보다 비난받을 일이 자주 발생한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할 때 사건·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사건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해자가 합법적 지위를 얻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에도 중요하므로 이 연구는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 위계에 주목하였다.

언론이 사고의 피해자를 다룰 때에도 피해자 위계가 존재한다고 한다. 비행기 사고 희생자를 보도할 때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국적, 연령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뉴스 가치 측면에서 피해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선진국 국민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주목받는다(Shoemaker & Reese, 1996).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나 사건 발생의 책임기관과 유가족, 피해자들은 협상도 하고 협상 과정에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적 행위도 한다. 보상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피해자’도 있고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있는 ‘침묵하는 피해자’도 있다(Greer, 2007).

피해자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이들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기도 한다(Shoemaker & Reese, 1996; Greer, 2007). 즉,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찬반으로 엇갈리기도 하는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처럼 야당이나 진보 세력이 이들의 행위에 동조하면서 보수층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sup>3)</sup> 피해자가 비난받는 현상을 설명하는 몇몇 견해가 있

3) 이단비(2015)의 논문과 정의당(2014) 보고서 참조.

다. 첫째, 사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때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이 발생한다(Altheide, 2007). 피해자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는 보통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권위 있는 기관이란 정부 관리, 법이나 규칙, 언론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충격적 사건이나 피해를 접한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 한다(Conaway, 2007; Greer, 2007). 다른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할 만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사고의 피해자가 비난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앞에 언급했듯이 정치적 입장이 다른 피해자라든지, 피해자에게 사건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게 된다.

이 연구는 사건·사고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현상에 주목하고 피해자 비난에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자 했다. 언론이 피해자를 어떻게 틀 짓는지는 독자의 피해자에 대한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Kim, Kim, & Cameron, 2009).

## 2) 피해자의 의견 표출 정도와 의견 표출 행위의 합법성에 의해 형성된 피해자 위계와 언론의 피해자 비난

그리어(Greer, 2007)는 언론이 사건 피해자의 인종과 계층, 민족, 성, 연령과 같은 요인이 피해자 위계를 형성해 언론으로 하여금 특정 피해자에 호의적 태도를 갖거나 부정적 태도를 갖도록 한다고 했다. 피해자를 비난할 때 사건 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사건 발생의 귀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밝혀질 경우 피해자를 비난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그리크(Greek, 2007)의 분류를 토대로 사건·사고 피해자가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동정을 받는지 혹은 비난을 받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피해자들의 성격에 따라 언론에서 이들을 어떻게 다르게 묘사하는지 밝히기 위해 보수 종편의 보도를 중심으로 피해자 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행동하는 피해자를 어떻게 명명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먼저, 뉴스 가치의 관점에서 침묵하는 피해자보다는 행동하는 피해자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지 의견 표출 정도를 고려했다. 의

견 표출이 많을수록 언론이 주목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개인이나 집단이 힘이 없을 경우에는 언론의 관심을 받기 쉽지 않다(Shoemaker & Reese, 1996). 권력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 국가의 경우 언론의 일상적인 뉴스 취재 범위에 들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일탈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피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합법적인지 살펴보았다.

행위의 합법성은 뉴스 가치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힘이 없는 사람의 경우 일탈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언론의 관심을 받기 때문이다(Shoemaker & Reese, 1996). 1960, 1970년대 학생의 시위 보도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경찰의 경우 법 수호자로, 시위대는 질서 파괴자로 그려졌다. 언론은 시위의 원인보다는 결과에 치중하고 시위로 인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며 시위를 일탈 행위로 규정했다(Hallin, 1981). 언론에서 시위대를 일탈자로 낙인 한다면 이들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언론이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정치적 행위는 기자회견에서부터 행진, 시위, 단식 등 다양하다. 뉴스 가치 관점에서 언론은 일탈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사회 질서를 지키는지,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지 등 피해자의 행위를 합법성의 측면에서 보는 것은 언론이 피해자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할지, 범법자로 규정할지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연구는 피해자가 의견 표출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행위의 합법성에 따라 피해자를 유형화했다. <표 1>에서 보듯이 의견 표출 정도를 ‘적극적’, ‘소극적’으로 구분하고 행위의 합법성에 따라 ‘합법적’과 ‘일탈적’으로 구분했다. 그루닉(Grunic, 2005)의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에 따르면 공중이 얼마나 이슈를 인지하고 행동하는가가 중요하다. 상황이론에서는 공중의 문제 인식 정도와 행동 표출 정도에 따라 ‘잠재적, 지각적, 행동적’ 공중으로 분류한다(Schmitz, 2012). 이 연구는 그루닉의 상황 이론을 토대로 의견 표출에 적극적인 피해자를 상황 인식 정도가 높고 의견 표출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행동하는’ 공중으로 개념화했고 문제를 인식하지만 의견 표출을 소극적으로 하는 공중을 ‘지각하는’(aware) 공중으로 보았다. ‘지각하는’ 공중이란 상황을 인식하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표 1. 피해자의 의견 표출 정도와 행위의 합법성에 따른 피해자 유형화

합법성	의견 표출	적극적	소극적
	높음	합법적 행동하는 피해자	합법적 지각하는 피해자
낮음	일탈적 행동하는 피해자	일탈적 지각하는 피해자	

그렇다면, 언론은 이러한 유형의 피해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는 언론의 뉴스 가치, 이데올로기, 조직의 관행이 범죄 보도에서 피해자를 묘사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언론이 피해자를 어떻게 재현(representation)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사건·사고의 발생원인, 책임 소재 등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문제 이상으로 중요하다. 언론은 피해자를 과도하게 드러내거나, 중요하지 않게 취급할 수도 있으며, 잘못 묘사할 수도 있다(Altheide et al., 2001). 한일 간에 참여한 대립을 가져온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극우 언론의 경우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안부'를 자발적 성매매로 틀리게 묘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세월호 사건이나 삼풍 사건과 같은 사건·사고 피해자의 경우 범죄 뉴스의 가치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죄 뉴스의 경우 폭력성, 새로움, 위험성, 성적인 함의 등이 뉴스 가치가 되지만 사건·사고의 경우 뉴스 가치가 다르다(Jewkes, 2004). 사건·사고 희생자를 기사화할 때 언론은 독자가 깊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구성해 독자의 동정심을 얻는다. 범죄 기사의 핵심적 서사 구조는 책임이나 비난 귀인을 누구에게 하느냐이다. 비난은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없는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볼 것이다. 즉, 언론이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를 어떻게 다르게 묘사하는지 살펴보고 피해자 위계가 언론이 피해자를 틀 짓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슈메이커와 리즈의 계층 모델에 따르면 기자 개인의 교육 수준, 성별, 경험과 언론 관행, 조직, 사회, 이데올로기 등 여러 층위에서 언론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oemaker & Reese, 1991). 이 연구는 여러 요인 중에서 조직의 정치적 성향과 뉴스 가치가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피해자에 대한 매체가시성, 단어의 현저성과 중심성을 중심으로 본 언론의 프레임

피해자 유형에 따른 언론 보도를 비교하기 위해 양적 측면에서 매체가시성과 질적 측면에서 언론의 프레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론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주목하고 더 많이 보도한다는 점에서 보도량을 살펴보는 것은 언론의 뉴스 가치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얼마나 호의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보도했는지도 언론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어떻게 틀 짓는지 알아보았다.

사건·사고 보도에서 언론이 사건을 얼마나 두드러지게 보도했는지 매체가시성(media

visibility) 내지는 언론 주의(attention)가 학자의 주요 관심사이다. 태풍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 사진 자체가 쉽게 독자의 주의를 끌 수 있기 때문에 가시성도 높다. 사진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사연, 배경 등 피쳐 스토리도 독자의 관심을 끈다. 매체가시성은 언론이 특정 집단이나 인물, 사건을 얼마나 자주, 두드러지게 보도하는지를 의미한다(Blankespoor & deHaan, 2014). 신문 지면의 경우 보도 크기로 파악하기도 하고 방송의 경우에는 보도량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질적 측면에서 쟁점화 수준을 매체가시성으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 매체가시성은 특정 집단을 얼마나 자주 보도하는지를 의미한다. 학자는 매체가시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으로 뉴스 가치를 언급하는데(Capriotti, 2009) 이 연구도 뉴스 가치 측면에서 지각하는 피해자보다 행동하는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피해자보다 일탈적으로 행동하는 피해자가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세월호 피해자의 의견 표출 정도와 행위의 합법성에 따라 보수 중편의 프레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기 위해 네트워크 접근을 했다. 네트워크 접근은 언론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해서 연설문이나 기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박성희, 2009; 이창길, 2010; 홍주현·윤해진, 2014). 주로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설문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를 찾아내고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정책 입안자가 중시하는 가치를 밝혔다. 특정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달자가 그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에서도 단어가 많이 언급될수록 수용자에 의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다(Pang & Lee, 200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를 단어의 현저성(salience)으로 보고 기사에 사용된 단어의 현저성을 알아보았다. 단어의 현저성은 기사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많이 언급되었는지를 뜻한다.

기사에서 특정 집단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현저성뿐만 아니라 단어와 단어의 관계에서 어떤 단어가 영향력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어 간의 관계에서의 영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성(centrality)은 단어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매개중심성, 인접 중심성, 위세중심성 분석을 통해 어떤 단어가 영향력이 큰지 알 수 있다.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값이 크다면 다른 단어와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단어와 단어 간 최단 거리의 값을 합한 평균값으로서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다리 역할을 하는 단어를 의미한다. 인접 중심성은 직접 연결된 단어와의 값을 구한 매개중심성과 달리 단어와 연결된 단어까지 고려한 값으로 한 단어가 다른 단어에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를 나타낸다.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은 영향력이 있는 단어와 얼마나 많이 연결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단어의 위세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기사 내에서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Green, McColl, & Bader, 2012).

단어의 현저성과 중심성 분석을 토대로 언론이 피해자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프레임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프레임은 언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다. 언론이 사건을 어떻게 틀 짓는지에 따라 사건은 다르게 구성된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뉴스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기자, 조직의 관점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Shoemaker & Reese, 1996). 사건의 어느 속성을 선택해서 강조하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여러 프레임은 경쟁을 통해 지배적 프레임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를 프레임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 연구는 단어의 현저성과 중심성을 중심으로 핵심 단어를 찾아내고 단어 간의 연결 관계를 통해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프레임을 밝히고자 한다. 언론은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선택하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사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부정적으로 낙인(naming)할 수 있다. 낙인은 본래 사회학에서 범죄자로 낙인을 한다는 것에서 나온 개념인데 언론이 범죄자, 피해자에 대해 낙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단어 간의 관계를 통해 언론이 피해자를 어떻게 낙인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4) 피해자 위계와 언론의 피해자 비난의 관계

이 연구는 언론이 피해자에 따라 동정심을 보이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보도할 때 피해자 위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피해자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하고 피해자 위계의 원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있다고 보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피해자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의견 표출 정도와 행위의 합법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언론이 어떻게 다른 태도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뉴스에 나타난 권력 관계에 주목했다. 힘이 있는 조직이나 집단의 경우 언론의 일상적인 취재 범위에 포함되며 뉴스의 주요 취재원이 된다. 뉴스에서 행정부, 법원, 국회, 선진국이 그렇지 않은 조직이나 국가보다 더 많이 보도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집권당에 속하고 중요한 상임위원회에 속할수록 매체가 시성 높게 나타났듯이 사건·사고의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피해자 위계(the hierarchy of victimization)에 따라 언론의 주목 정도나 보도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어(Greer, 2007)가 언급했듯이 피해자가 백인, 지위가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일 경우 언론으로부터 더 동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이 없는 조직이나 집단은 정상적으로 행동할 때보다 일탈할 때 뉴스 가치가 있으며 이때 언론으로부터 주목받는다(Shoemaker & Reese, 1996). 슈메이커와 리즈의 계층모델에 따르면 힘이 없는 집단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때보다 일탈 행위를 할 때 언론에 보도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행동하는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므로 ‘지각하는 피해자’보다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였다. 힘이 없는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행동할 때보다는 일탈적인 행동을 할 때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될 것이다. 즉, ‘합법적 행동을 하는 피해자’보다 ‘일탈적 행동을 하는 피해자’의 매체가시성이 높을 것이다.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피해자 위계에 따라 언론 보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합법적 행동을 하는 피해자보다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피해자에 대해 언론의 보도가 더 부정적인 것이다. 홀린(Hallin, 1981)은 언론은 전쟁, 살인과 같이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비난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집회, 시위 같이 일탈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관점에 따라 합법적이 될 수도 있고 일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위 같은 경우 언론이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합법적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범법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이 연구는 보수 종편에서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건·사고 피해자의 시위나 집회를 일탈 행동으로 정의하고 부정적으로 보도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 연구는 사건·사고의 피해자의 행위에 따라 언론이 어떻게 다르게 틀 짓는지 밝히기 위해 피해자를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로 구분하고 피해자의 행위를 합법성을 기준으로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했다.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낙인을 언론 보도 중심으로 규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했다.

- 연구 문제 1: 피해자의 의견 표출 정도와 행위의 합법성에 따라 매체가시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2: 피해자의 의견 표출 정도와 행위의 합법성에 따라 보수 종편 보도에서 단어의 현저성과 중심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3: 피해자의 의견 표출 정도와 행위의 합법성에 따라 대한 보수 종편의 프레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사건·사고의 피해자 유형에 따라 언론의 프레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 차이가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의견 표출 정도와 행위의 합법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했고 세월호 유가족 보도에 대한 매체가시성과 네트워크 분석, 프레임 분석을 실시했다.

#### 1) 연구 설계

〈표 2〉에서 보듯이 이 연구는 양적 측면에서 매체가시성을 분석했고 질적 측면에서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실시했다. 언론의 프레임을 밝히기 전에 먼저 어절 분석을 통해 어떤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어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어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혔다. 다음으로 단어의 현저성과 중심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언론의 프레임을 밝혔다. 피해자 위계가 매체가시성과 단어의 현저성·중심성, 프레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표 2. 세월호 유가족 언론 보도 네트워크 분석·프레임 분석 설계

연구 주제 및 분석 대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양적 측면	매체가시성	피해자 유형에 따른 보도량 분석	분석 기간 중 보도 횟수
질적 측면	1. 단어의 현저성, 중심성	주요 단어 및 단어 간 관계 분석	어절 분석 네트워크 분석
	2 프레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프레임 분석

#### 2) 분석 대상 이슈

사건·사고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지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규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작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세월호 유가족 보도를 분석 대상으로 한 이유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 제정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면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들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세월호 유가족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보수 종편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밝히고 사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 3) 분석 시기 및 시기 구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을 분석하기에 앞서 실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주요 사건을 정부와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분해서 정리했다. 유가족에 대한 프레임이 어떻게 변했는지 밝히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 9월 30일까지를 분석 시기로 했다. 4월 30일 대통령이 사과하고 유가족이 청와대를 방문한 시기를 1기로 보았고 ‘유가족 정부 안전대책 촉구’로 구분했다. 2기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란이 시작된 시기로 유가족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면서 촛불 집회에 대한 참가 여부에 차이를 나타낸 시점이다. 2기를 세월호 특별법 제정·진상 규명 요구 촛불집회’로 보았다. 3기는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활동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4기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은 시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동참했고 유가족도 거리 행진, 농성, 광화문 광장 집회 등 정치적으로 투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7월 12일부터 유민 아빠의 단식이 중단된 8월 28일까지를 4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란’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5기는 세월호 유가족과의 3차 면담이 결렬된 9월 1일부터 여야,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한 9월 30일까지이다. 이 시기는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쟁점화 된 시기로 ‘세월호 유가족 폭행 논란’으로 보았다.

표 3. ‘세월호 유가족’ 관련 시기 및 주요 행동 구분

시기	주요 사건	정부 대응	유족 대응/유족지지 집단 대응
1기: 유가족 정부 안전 대책 촉구	4.30.	박 대통령 국무회의 석상 사과 논란, 민경욱 대변인: 유감	유족 “사과 못 받아들여”
	5.6.	박 대통령 봉축법요식에서 사과	• 동진당 등 대통령 하야 시위
	5.7.	-	• 전교조 홈페이지 추모 동영상 반정부 선동 • 유가족: 안전 대책 마련하라는 것
	5.9.	민경욱 대변인: 순수 유가족 발언 논란	• 세월호 유가족 KBS 항의 방문(경찰 대처) • 청와대 앞 시위 및 정무수석, 홍보수석과 면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 요구
	5.10.	-	• 유가족 유병근 대변인: 공식 추모 집회 참석하지 않겠다. • 유가족에 따라 의견 달라
2기: 세월호 특별법 제정·진상 규명 요구 촛불집회	5.16.	• 박 대통령 세월호 유가족 면담 • 진상조사특별법 특검 필요 약속	-
	5.17.	-	청계광장 대규모 촛불 집회/유가족 비참여
	5.19.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가족대책위 특별법 제정 및 진상 규명

표 3. 계속

시기	주요 사건	정부 대응	유족 대응/유족지지 집단 대응
2기: 세월호 특별법 제정·진상 규명 요구 촛불집회	5.24.	-	주말 촛불 집회, 유가족 일부 참여
	5.27.	여야 국정조사 증인 대립	세월호 유가족 국회에서 합의 요구
	5.30.	여야 국정조사 합의	-
	6.7.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천만인 서명 운동
3기: 세월호 국조특위 활동	7.2.	세월호 국조특위 정부 질타	가족대책위원회의 기관장과 국조특위비판
	7.4.	세월호 사고 보상금 논란	-
	7.11.	세월호 특별법 통과 목표	-
4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란	7.12.	세월호 특별법 막판 조율	전교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
	7.15.	세월호 특별법 처리 불투명	유가족 단식 농성
	7.17.	세월호 특별법 마련 실패	세월호 특별법 제정 거리 행진
	8.10.	세월호 특별법 야당 강경파 반대	유족들 반대
	8.19.	여야, 세월호법 합의	유족 반대로 표류
	8.20.	문 의원 단식 동참	유가족 총회 개최
	8.21.	면담 거부	일반인 희생자 유족 합의안 지지
	8.23.	문 의원 5일째 단식 농성	가족대책위 청와대 앞 면담 재요청 농성
	8.25.	여, 3자 협의체 거부, 유가족에게 입법권 줄 수 없어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여야 합의안 수용' 기 자회견
	8.27.	새민연 밤샘 농성, 장외투쟁	유가족 참여 시청 광장 집회
8.28.	-	유민 아빠 단식 중단	
5기: 세월호 유가족 폭행 논란	9.1.	새누리당, 유가족 3차 면담 결렬	-
	9.15.	-	가족대책위 대국민간담회 개최 계획 및 27일 광화문 광장 집회 예고
	9.17.	-	세월호 유가족 대리운전기사 '폭행혐의'
	9.26.	-	· 세월호 유가족 대학 내 간담회 개최 · 일반인 유가족 합동분향소 영정 뱀
	9.30.	세월호 특별법 타결	-

#### 4) 분석 대상 매체 및 보도 건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을 밝히기 위해 이 연구는 4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채널A와 TV조선의 메인 뉴스를 분석했다. 보수 중편인 채널A와 TV조선을 선택한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진보 단체가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이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언론이 피해자를 어떻게 낙인하는지 밝히고자 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즉, 언론의 피해자 보도에 '피해자 위계'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했기에 비슷한 성격의 매체를 선택해 매체의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보수

종편이 피해자의 행동에 따라 어떻게 다른 태도를 취하는지 규명하고자 했기에 비슷한 성격의 매체 두 개를 선택했다.

선행 연구에서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 주목받고 확산된 뉴스는 보수 종편 채널의 선정적이고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뉴스이다. 종편에서 선정적인 뉴스를 생산하고 이 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중앙일보〉, 2014, 8, 1; 이기형, 2014; 홍주현, 2014). 따라서 보수 종편 채널이 시청률은 낮지만 SNS를 통한 사회적 확산과 영향력은 적지 않다고 생각했다. 분석 기간 동안 두 매체의 메인 뉴스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세월호 관련 보도 중 ‘유가족’ 중심의 보도는 총 225건이었다. 〈표 4〉는 분석 시기별 메인 뉴스의 세월호 유가족 보도 건수를 보여준다.

표 4. 종편 메인 뉴스의 시기별 세월호 유가족 중심의 보도 건수

매체	1기	2기	3기	4기	5기	전체
TV조선	17	14	3	52	44	130
채널A	14	16	3	35	20	88
합계	31	30	6	87	64	218

## 5) 피해자 유형화

이 연구는 피해자를 의견 표출 정도와 행위의 합법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했다. 의견 표출 행위를 덜 하고 합법적 행동을 할수록 언론이 호의적으로 보도할 것으로 보았다.

### (1) 피해자 유형 조작적 정의: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

이 연구는 사건·사고 피해자를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로 구분했다. 행동하는 피해자는 보상 문제나 법규 등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이다. 기자회견, 집회, 단식, 행진 등 정치적 행위를 자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 연구에서 ‘지각하는 피해자’는 상황을 인식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진보 세력, 전교조와 같이 기득권의 반대 입장에 선 단체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면서 정부 대책에 반대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sup>4)</sup> 세월호 유가족 중 일부가 정치 집회에 참가하고 점

4) 〈표 3〉 ‘세월호 유가족’ 관련’ 시기 및 주요 행동 구분 내용 참조.

표 5.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 조작적 정의

피해자	조작적 정의	구체적 사례	분석 대상 집단
행동하는 피해자	집합적 행동을 하거나 공식적 수단을 활용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피해자	· 공식적 수단: 기자회견, 발표 · 집합적 행위: 정부기관 방문, 시위	세월호 유가족(단원과 유가족, 이하 세월호 유가족)
지각하는 피해자	· 집합적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음. · 비공식적 수단을 활용함. · 드물게 의견을 표출함.	유가족 대표 발언	일반인 유가족

차 행동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려는 유가족이 생겼다. 이러한 유가족의 행동과 입장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유가족을 ‘일반인 유가족’과 ‘단원과 유가족’으로 구분했다. <표 5>는 피해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 (2) 피해자 행위의 합법성 조작적 정의

피해자 행위의 합법성은 법과 규칙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의미한다. 시위를 하더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시위는 합법적으로 보았다. 합법적 시위를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법을 어겼다면 합법성이 낮다고 했다. 합법성은 법과 질서를 해치지 않았는지를 의미하며 단식, 무력시위, 충돌 등은 일탈 행위로 보았다.

## 6) 언론 보도 네트워크 분석

언론 프레임을 밝히기 위해 먼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네트워크 분석은 NodeXL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어절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그사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를 추출했다. 어절 분석은 국립국어원의 한마루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어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했다.

### (1) 단어의 현저성 조작적 정의

단어의 현저성은 특정 단어가 얼마나 많이 기사에서 언급되었는지를 뜻한다. 단어 개를 기준으로 언급된 횟수를 측정했다. 단어의 현저성은 국립국어연구원의 한마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했다.

### (2) 단어의 중심성 조작적 정의

단어의 중심성은 단어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측정한 것으로 NodeXL 프로그램에서 중

심성 분석을 실시했다. 매개중심성, 인접 중심성, 위세중심성 값을 분석한 후 단어별로 차이가 큰 값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 7) 언론 프레임 분석

언론 프레임은 단어의 현저성과 중심성을 기준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을 언론이 어떻게 틀 짓는지를 의미한다. 기사를 읽으면서 영향력이 있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중심적인 단어는 무엇인지 밝히고 언론에 사건을 구성하는 방식을 찾아내었다.

### 4. 연구 결과

사건·사고 피해자의 의견 표출 정도와 행위의 합법성이 언론 프레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먼저 세월호 유가족을 분류했다. 다음으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고 피해자 유형에 따라 프레임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했다.

#### 1) 의견 표출 정도와 행위의 합법성을 근거로 한 세월호 피해자 유형 분류

먼저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의 의견 표출 행위를 합법성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다. 앞의 <표 5>를 근거로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유가족(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으로 구분했다.<sup>5)</sup> 분석 기간 동안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했는데 <표 6>은 이들의 행동을 근거로 분류한 내용을 보여준다. 신고한 시위의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만 시위했을 경우 합법성 ‘높음’으로 분류했고 신고한 시위라고 하더라도 시위 과정에서 무력 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 이동한 경우 합법성 ‘낮음’으로 분류했다. 유가족의 행위가 합법적인지 비합법적인지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와 <제 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 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근거로 분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신고한 시간,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넘으면 불법집회로 간주된다. 외국의 경우는 ‘폴리스 라인’을 넘은 경우 불법집회이다. <표 6>을 보면 행동하는 피해자의 경우 합법성이 낮은 행위를 여러 번 했다. 행동하는 피해자는 합법적 행위

5) 이론적 배경의 피해자 유형화 참조.

표 6. 피해자 유형별 행위의 합법성 분석 결과

합법성		행동하는 피해자	지각하는 피해자
낮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위반한 행동: (신고한) 집회에 참가해서 신고 범위를 넘은 진출, 경찰을 향해 도구를 이용해 항의(행진, 농성, 단식, 시위, 폭행)	22회	0회
		불법 시위 5회, 농성 4회, 불법 행진 4회, 단식 2회, 무력시위 5회, 폭행 1회, 입건 1회	-
높음	기자회견, (신고한) 집회, 항의 방문, 서명	9회	4회
		기자회견 3회, 집회 2회, 항의 방문 3회, 서명 1회	담화 1회, 기자회견 3회

주: 피해자 행위의 합법성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http://416family.org/>)의 내용과 분석 기간 동안 언론 보도를 근거로 분석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81901#>. 원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를 9회했고, 비합법적 행위를 22회했다. 지각하는 피해자의 경우 합법성이 낮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합법성이 높은 의견 표출 방법을 4회했다. 행동하는 피해자의 단식 행위일 경우 시행 횟수는 적지만 단식을 장기간 해서 파급력은 적지 않았다. ‘단식’을 합법성이 낮음으로 분류한 이유는 단식을 행한 장소가 서울시로부터 사건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이고 정상적 행위에서 떨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Shoemaker & Reese, 1996).

〈표 5〉와 〈표 6〉을 토대로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 관련 피해자를 구분했다. 단원고 유가족의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분석 기간 동안 합법성이 낮은 행동을 빈번하게 했다는 점에서 ‘일탈적 행동하는 피해자’로 보았다. 단원고 유가족의 경우 기자회견과 의견 발표 외에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시위,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아 ‘합법적 지각하는 피해자’로 보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 유형에 따라 매체가시성과 언론의 프레임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했다.

## 2) 피해자 유형별 매체가시성 분석

1기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유가족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한 시기이다. 세월호 유가족의 의도와 달리 반정부 세력이 집회에 참가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은 일반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 세월호 유가족은 단원고 유가족을 의미한다. 이들과 구분하기 위해 단원고 유가족을 제외한 유가족을 일반인 유가족이라고 했다. 시기별 분석 전에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와 관련된 보도량을 비교해 봤다(〈표 7〉 참조). 〈표 6〉을 보면 행동

표 7. 피해자 유형별 매체가시성 분석 결과

시기	일탈적 행동하는 피해자	합법적 지각하는 피해자	합계(전체 유가족 관련 보도 건수)
1기	26건	4건	30건(31건)
2기	24건	2건	26건(30건)
3기	6건	-	6건(6건)
4기	36건	4건	40건(87건)
5기	24건	2건	26건(64건)
전체	116건	12건	128건(219건)

하는 피해자의 경우 합법성이 낮은 행위를 여러 번, 지속적으로 했기에 일탈적 행동하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각하는 피해자의 경우 합법적 행동을 몇 번했으므로 합법적 지각하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표 7〉을 보면, 일탈적 행동하는 피해자의 매체가시성은 116건으로 합법적 지각하는 피해자의 12건에 비해 상당히 높다. 시기별로는 단식 농성과 여야가 합의안 세월호 특별법 수용을 거부한 4기에 36건으로 보도량이 가장 많았다. 지각하는 피해자의 경우 의견 표출 행위도 적고 보도량도 적었다. 1기에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출했고 4기에는 여야 합의안을 수용한 행위가 보도되었다.

### 3) 시기별 단어의 현저성·중심성 네트워크 분석

#### (1) 단어의 현저성 분석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세월호 유가족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피해자이고 일반인 유가족은 지각하는 피해자이다. 이들에 대한 어절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각각 많이 언급된 순서대로 10개까지만 제시했다. 행동하는 피해자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민노총, 전교조, 범민련, 야당 등 반정부 세력이 등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단어가 언급되었다. 유족들의 정치적·집합적 행위로 침묵시위, 선동, 항의, 촛불집회가 있었고 좌파, 진보연대가 등장해 유가족을 정치 세력과 동일시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반면, 지각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 보인다. 세월호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고 행동하는 피해자와 구분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2기는 촛불집회가 주말마다 열리고 일부 유가족이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기이다.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이 열렸고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야의 국정조사에 대해 유가족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수색에 집중해달라는 의견을 나

타냈다. <표 9>를 보면, ‘행동하는 피해자’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많이 언급되었고, 1기와 마찬가지로 주말, 충돌, 진보, 좌파, 민주노총, 한총련, 진보 단체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에 진보 세력, 반정부 세력이 동참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이 진보 세력과 동일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유가족이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에 참석하면서 일반인 유가족, ‘지각하는 피해자’는 ‘정치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이용하지 말라고 했고 보수 종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뤘다.

3기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보도가 많지 않았고 단원고 학생의 특례 입학 논의가 이루어진 시기이므로 피해자별로 구분해서 어절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분석 대상 매체에서 일반인 유가족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표 10>을 보면 세월호와 국조특위, 단원고가 여러 번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시기와 달리 이 시기에 ‘단원고’와 ‘특례’, ‘입학’, ‘3학년’, ‘학생들이’가 언론에서 주목받았다.

표 8. 1기: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 어절 분석 결과

	행동하는 피해자		지각하는 피해자	
1	세월호	34	유가족	15
2	유가족	23	세월호	8
3	청와대	15	희생자	7
4	희생자/KBS	12	정치적으로	6
5	박근혜/정부	9	이용하지/촛불	5
6	선동/민주노총/참사/퇴진/정치	7	학생	4
7	침묵시위/대통령	6	보수단체	3
8	침몰/단원고/면담/좌파/진보연대	4	순수한/유경근/공식/면담/고성이	2
9	항의	3	-	-
10	전교조/민노당/촛불집회/범민련/야당	2	-	-

표 9. 2기: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 어절 분석 결과

	행동하는 피해자		지각하는 피해자	
1	유가족	20	참석하지	5
2	세월호	10	유가족	4
3	보수	8	수색	3
4	촛불/희생자/집회를	5	기자회견문/정치적으로/세월호/ 국정조사/실종자	2
5	정치/집회/청와대/주말/충돌/ 민주노총/진보단체/진보/퇴진/	3	-	-
6	한총련/박근혜/좌파	2	-	-

4기는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동참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해 박영선 대표가 이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일반인 유가족은 여야 합의를 받아들인다고 기자 회견을 해서 대조를 이뤘다. 행동하는 피해자 관련 보도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피해자’가 많이 언급되었고 ‘여야’,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과 단식, 농성이 자주 등장했다. 이밖에 ‘가족대책위’(8), ‘진상조사’(7), ‘집회’(6) 순으로 언급되었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 유가족 간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일반인 유가족은 여야 합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세월호 유가족과 대조를 이루었다.

5기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논란이 발생하고 일반인 유가족이 영정을 합동분향소에서 빼겠다고 한 시기이다. 행동하는 피해자 보도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많이 언급되었고 ‘대리기사’, ‘의원’, ‘김현’이 주로 등장했다. ‘경찰’, ‘폭행’, ‘혐의’, ‘폭력행위’, ‘대리 운전’ 등 사건 관련 단어가 자주 등장해 이 사건에 주목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지각하는 피해자의 경우 일반인이 12번 언급

표 10. 3기: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 어절 분석 결과

1	행동하는 피해자		지각하는 피해자	
	어절	빈도	어절	빈도
1	세월호	13	-	-
2	국조특위	6	-	-
3	단원고	4	-	-
4	참사/3학년/유가족/학생들이	3	-	-
5	특례/입학/특별법/희생자/여당/여야	2	-	-

표 11. 4기: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 어절 분석 결과

1	행동하는 피해자		지각하는 피해자	
	어절	빈도	어절	빈도
1	세월호	71	세월호	7
2	유가족	52	일반인/희생자/참사	4
3	피해자	40	여야/재합의안	3
4	여야	34	입장을/단원고/면담/발표/특별법	2
5	새정치민주연합/단식	19	-	-
6	희생자	17	-	-
7	세월호 특별법	15	-	-
8	광화문 광장/국회/농성	11	-	-
9	수사권/새누리당	10	-	-
10	야당	9	-	-

표 12. 5기: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 어절 분석 결과

	행동하는 피해자		지각하는 피해자	
1	유가족	55	희생자	15
2	세월호	54	일반인	12
3	대리기사	17	유족/영정을/안산/세월호	6
4	의원	16	합동분향소	5
5	김현	15	단원고	4
6	현수막	14	철수하기로/34명/다르게/봐 달라/결정했습니다	2
7	혐의/경찰/가족대책위/폭행	12	-	-
8	밝혔습니다	11	-	-
9	폭력행위/새정치민주연합	9	-	-
10	조사/시민들/특별법/대리운전	8	-	-

되어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을 구분 지음을 알 수 있다. ‘다르게’, ‘봐 달라’도 2건의 보도에 2번 등장 했다.

(2) 단어의 중심성 네트워크 분석 · 프레임 분석 결과

1기 행동하는 피해자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못 받아들인다고 하고 KBS를 항의방문했으며 청와대 홍보수석과 면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유병근 유가족 대변인은 추모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유가족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고 했다. 이 시기에는 전교조와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좌파 단체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그림 1>의 왼쪽 그림을 보면 네트워크 중앙에 ‘세월호-유가족-희생자’가 위치했고 유가족은 ‘좌파-선동’, ‘좌파-촛불집회-통진당’으로 연결되었다. ‘유가족-희생자-세월호’에서 세월호는 ‘민주노총-선동-정치’, ‘민주노총-반정부’로 연결되어 세월호 집회가 반정부 세력과 연결되었음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유가족은 ‘면담’, ‘박 대통령’과 연결되었고 ‘대통령-청와대’, ‘대통령-퇴진’으로 연결되어 유가족이 대통령 면담을 꾸준히 요구한 것을 보여 준다. 반면, 일반인 유가족은 ‘유가족-정치적’으로와 ‘유가족-집회-의견-달라’가 강조되어 보수 종편에서 ‘지각하는 희생자’를 ‘행동하는 희생자’와 차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은 단어의 중심성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한 세월호와 유가족의 매개중심성이 컸고 ‘좌파’, ‘참사’, ‘희생자’ 순으로 매개중심성이 높았다. 매개중심성 값이 크다는 것은 보도에서 다른 단어와 같이 자주 언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 ‘단체’, ‘박근혜’, ‘정치적’도 많이 언급되었다. 지각하는 피해자의 경우 보도량이 많지 않았는데 ‘유가족’, ‘외부’, ‘집회’, ‘촛불문화제’가 상대적으로 매개중심성 값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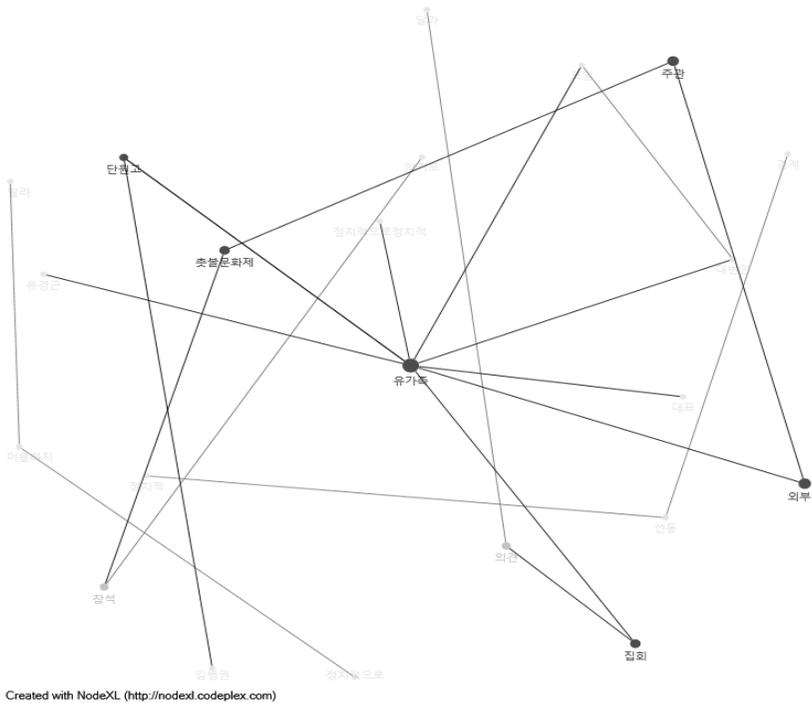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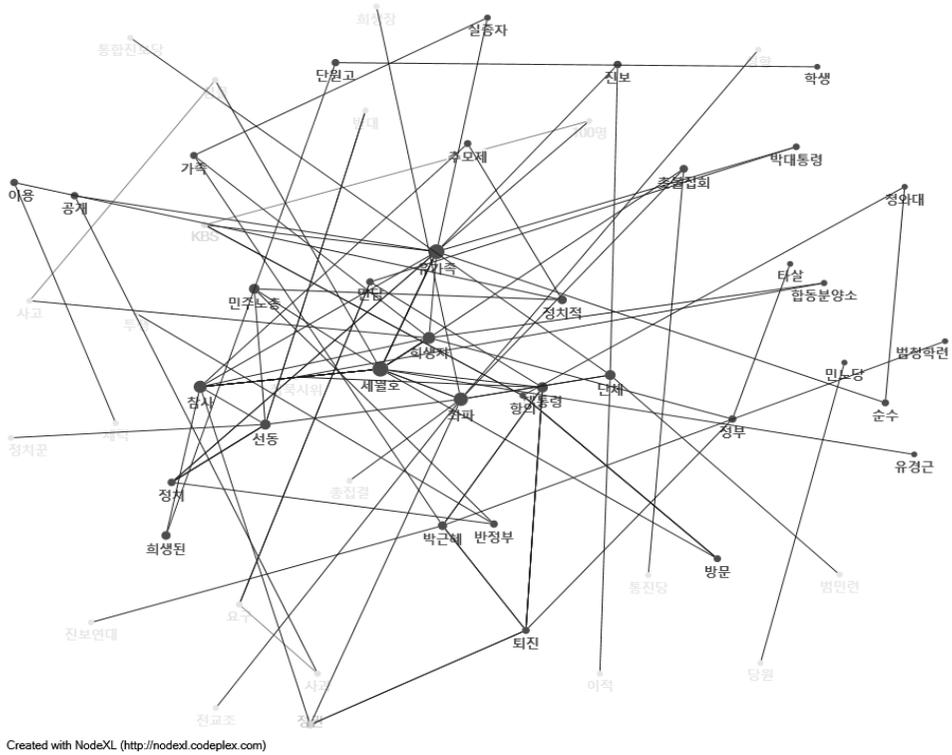


그림 1. 1기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 보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표 13. 1기: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 중심성 분석 결과

	행동하는 피해자				지각하는 피해자		
	매개중심성	인접중심성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인접중심성	위세중심성
세월호	491.340	0.008	0.076	유가족	90.000	0.034	0.080
유가족	471.383	0.008	0.078	외부	44.000	0.029	0.030
좌파	378.252	0.007	0.046	집회	26.000	0.026	0.081
참사	300.729	0.007	0.066	촛불문화제	26.000	0.019	0.011
희생자	283.883	0.007	0.066	단원고	14.000	0.024	0.080
대통령	187.952	0.007	0.027	의견	14.000	0.020	0.030
선동	173.976	0.006	0.038	참석	14.000	0.015	0.004
민주노총	172.755	0.006	0.028				
단체	166.750	0.006	0.016				
박근혜	113.750	0.005	0.010				
정치적	109.000	0.005	0.010				

1기 어절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동하는 피해자에 대한 언론 보도를 ‘반정부 세력 프레임’으로, 지각하는 피해자에 대한 언론 보도를 ‘순수 희생자 프레임’으로 보았다. 행동하는 피해자에 대한 어절 분석 결과를 보면 ‘선동’, ‘시위’, ‘좌파’, ‘퇴진’ 등 반정부 행위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좌파’, ‘선동’, ‘민주노총’ 등 정치적 단체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지각하는 피해자의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보도와 ‘순수한’이 언론에서 강조되었기 때문에 단원고 유가족과 차별시키기 위해 ‘순수 희생자’ 프레임으로 보았다.

2기는 광화문광장에서 매주 촛불집회가 열린 시기이다. 일부 유가족이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이 실시되었다. 행동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도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그림 1〉의 위 그림) ‘세월호-특별법-여야’, ‘세월호-전교조-참여연대’, ‘세월호-집회’로 연결되었다. 집회는 각각 ‘촛불’, ‘추모’, ‘행진’, ‘민주노총’, ‘요구’와 연결되어 보수 종편에서 세월호 집회를 보도하면서 반정부 세력의 참가를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집회-불법행위-폭력’, ‘집회-불법행위-폭행-경찰’로 연결되어 세월호 집회의 불법성이 강조되었다. 지각하는 피해자의 경우(〈그림 1〉의 아래 그림) ‘추모’와 ‘집회’가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해 중요하게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집회-추모-촛불-문화제’, ‘집회-유가족-모임’으로 연결되었고 ‘집회-공식적으로-참가하지’로 연결되어 보수 종편이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를 구분 짓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단어에 대한 중심성 분석 결과를 보면 행동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서는 ‘집회’와 ‘세월호’의 매개중심성 값이 가장 크고 ‘특별법’, ‘유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촛불’도



표 14. 2기: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 중심성 분석 결과

	행동하는 피해자				지각하는 피해자		
	매개중심성	인접중심성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인접중심성	위세중심성
집회	720.417	0.006	0.111	촛불	65.833	0.024	0.097
세월호	693.167	0.007	0.068	집회	50.167	0.023	0.109
특별법	475.000	0.006	0.019	추모	46.333	0.024	0.129
유가족	461.000	0.005	0.008	유가족	40.500	0.023	0.114
추모	257.833	0.007	0.080	문화제	32.000	0.019	0.037
주말	253.250	0.007	0.078	주관	27.167	0.020	0.087
실종자	248.500	0.004	0.002	참가하지	22.000	0.018	0.033
행진	147.000	0.005	0.028	행사	17.833	0.019	0.043
맞불	144.000	0.005	0.025	모임	17.000	0.017	0.042
담화	125.000	0.004	0.001	의견	17.000	0.017	0.040
국정조사	115.000	0.006	0.018	정권	17.000	0.014	0.014

144.000으로 높았는데, 반정부 세력의 집회에 대해 맞불 집회가 열린다는 것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여야의 ‘국정조사’도 높게 나타났다. 지각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서는 ‘촛불’, ‘집회’, ‘추모’, ‘유가족’의 매개중심성 값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관’, ‘참가하지’도 각각 27.167, 22.000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유가족이 세월호 유가족과 스스로 구분하면서 촛불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보수 종편에서 이 부분을 주목한 것으로 생각된다.

2기 어절 분석 결과와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동하는 피해자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틀 짓는지 살펴보면 1기보다 집회의 불법성이 부각되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진보 단체가 주말에 집회하는 것을 강조하고 특별법이 자주 언급되어 ‘집회 불법성 강조 프레임’으로 보았다. 지각하는 희생자의 경우 ‘참석하지’, ‘정치적’으로가 자주 언급되면서 1기와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피해자와 구분지어 ‘희생자 분리 프레임’으로 보았다.

3기는 세월호 국조특위의 활동과 사고 보상금 논란이 있었던 시기이다. 행동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도만 있었는데 세월호는 ‘희생자-가족-특례-단원고’로 연결되었고 ‘세월호-국조특위-여당’으로 연결되어 보상 문제가 논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각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중심성 분석 결과를 보면 ‘희생자’, ‘가족’, ‘특례’의 매개중심성 값이 커 보도에서 자주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희생자의 경우 위세중심성 값이 상대적으로 커 이 시기 보도에서 영향력이 있는 단어로 나타났다. 국조특위와 참사의 위세중심성 값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국조특위의 활동에 언론이 주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단원고 학생 특례입학과 국조특위가 설치되어 구체적 협상이 진행된 시기로 보수 종편에서도 보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희생자 보상 프레임’으로 보았다.

4기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단원고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시작된 시기이다. 보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행동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서는 ‘유가족-특별법-세월호’가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해 특별법이 쟁점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유가족-합의-단식-농성’으로 연결되었고 ‘단식-대통령-청와대-거부’로 연결되었다. ‘유가족-특별법’에서 특별법은 제정과 ‘세월호’, ‘국회’, ‘합의’로 연결되었다. ‘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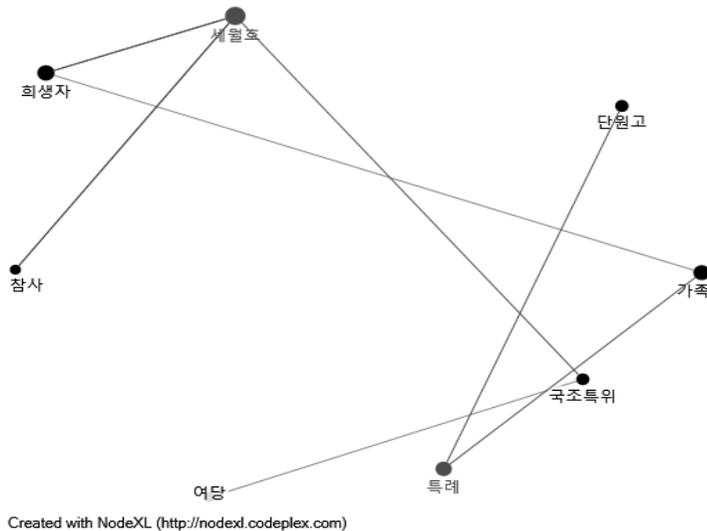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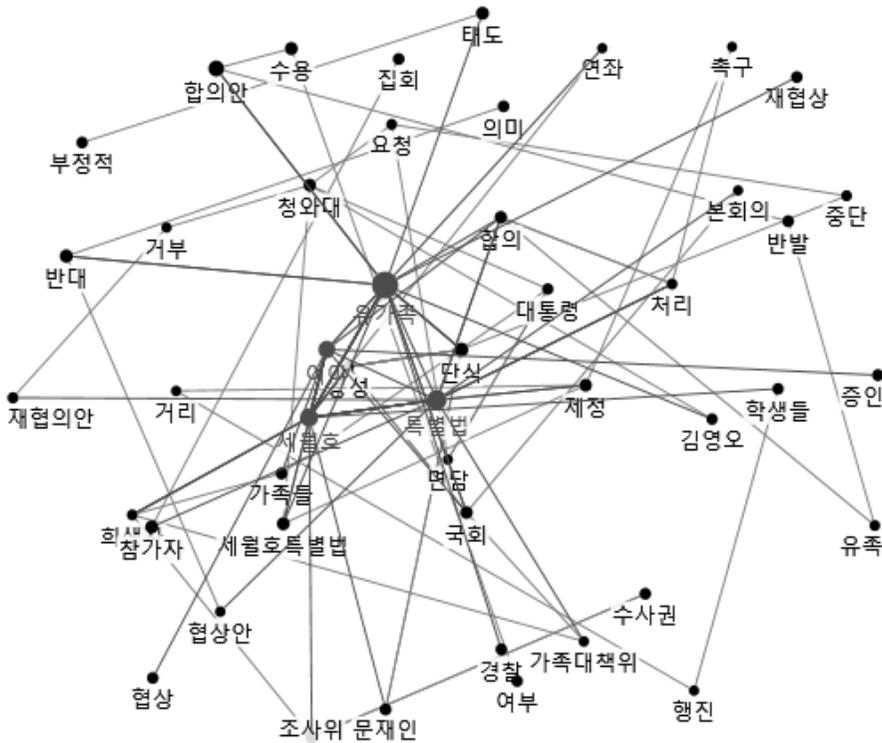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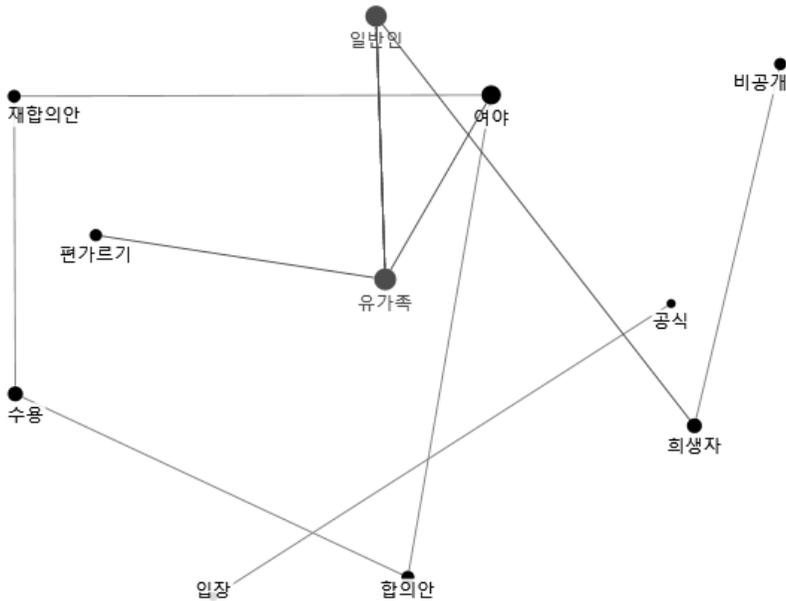
그림 3. 3기 행동하는 피해자 보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표 15. 3기: 행동하는 피해자 보도에 대한 중심성 분석 결과

	매개중심성	인접중심성	위세중심성
희생자	54.000	0.026	0.122
가족	50.000	0.024	0.038
특례	47.000	0.021	0.038
단원고	27.000	0.017	0.013
국조특위	26.000	0.022	0.119
참사	14.000	0.021	0.115
여당	14.000	0.017	0.034
유가족	0.000	0.020	0.098
특별법	0.000	0.020	0.098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그림 4. 4기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 보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표 16. 4기: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 중심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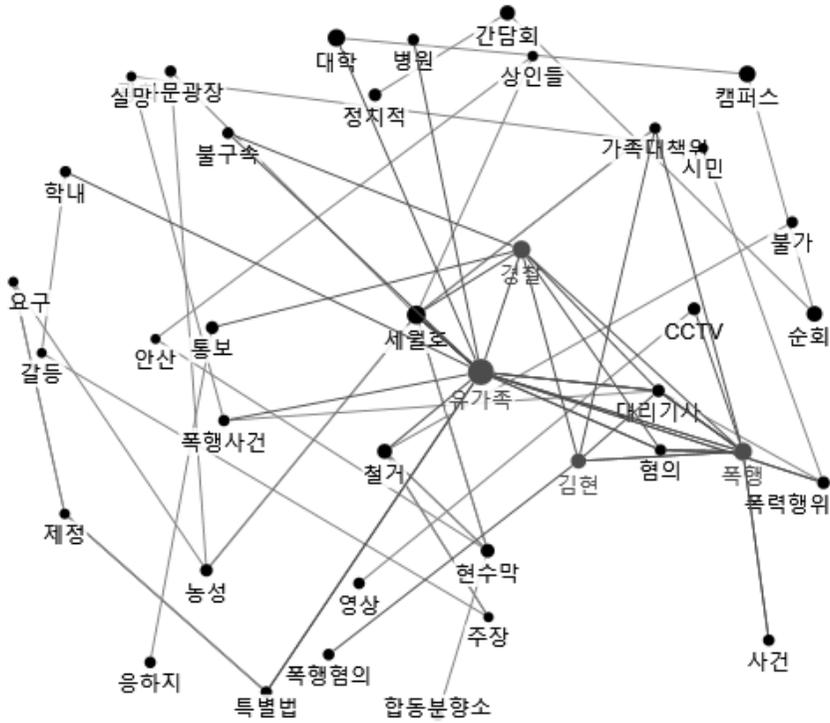
	행동하는 피해자				지각하는 피해자		
	매개중심성	인접중심성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인접중심성	위세중심성
유가족	1133.394	0.008	0.094	유가족	76.000	0.028	0.134
특별법	556.091	0.007	0.072	일반인	71.000	0.026	0.183
세월호	427.680	0.006	0.062	여야	55.500	0.024	0.064
여야	365.899	0.007	0.064	수용	29.500	0.017	0.025
합의안	276.381	0.005	0.017	희생자	28.000	0.020	0.069
단식	170.872	0.005	0.024	합의안	18.000	0.020	0.030
반대	135.602	0.005	0.019	편 가르기	15.000	0.020	0.059
세월호 특별법	127.574	0.006	0.032	비공개	15.000	0.016	0.026
조사위	124.000	0.005	0.014	-	-	-	-
참가자	124.000	0.005	0.013	-	-	-	-
합의	101.049	0.006	0.044	-	-	-	-

법-합의-유족-반발’, ‘유가족-합의안-중단’으로 연결되어 유가족이 여야 합의안에 반대 한 내용이 부각되었다. ‘유가족-단식-문재인-세월호’로 연결되어 문재인 의원이 단식에 동참한 것을 보도했다. 유가족은 ‘단식’, ‘김영도’, ‘재협상’, ‘반대’, ‘여야’로 연결되어 유 가족이 여야의 합의안에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한다는 것이 이 시기 핵 심 쟁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각하는 피해자 보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유가 족-일반인’과 연결되어 단원고 유가족과 차별화를 꾀했으며 행동하는 피해자와 달리 이 들은 ‘유가족-여야-재협상-수용’으로 연결되어 여야 합의안에 찬성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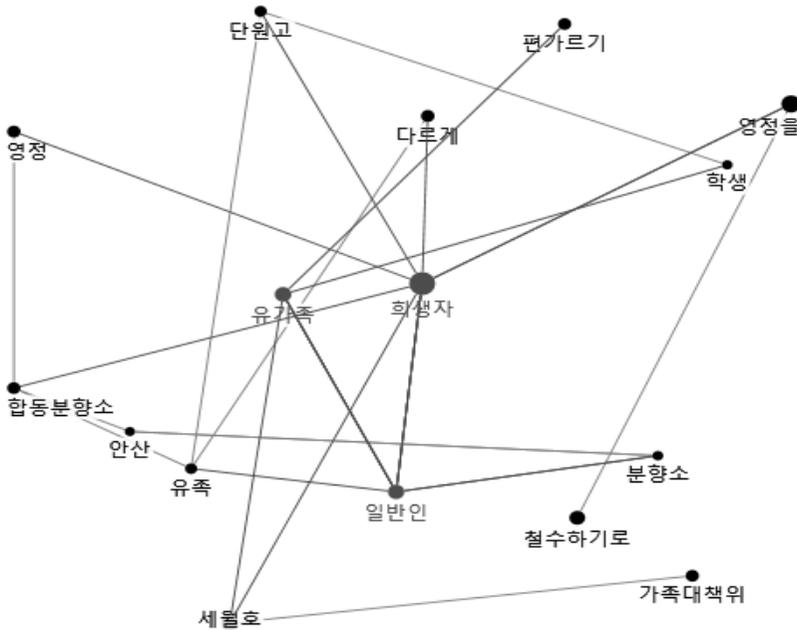
행동하는 피해자 보도에서 ‘유가족’, ‘특별법’, ‘세월호’, ‘여야’의 매개중심성 값이 커서 이 단어들이 보도에서 자주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합의안, 단식, 반대가 높아 여야 합의에 반대했다는 내용이 강조된 것을 보여준다. 지각하는 피해자의 경우 ‘일반인’이 강조되었고 ‘편 가르기’도 강조해 일반인 유가족이 단원고 유가족과 다름을 부각시켰다.

4기는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강조하고 유가족의 단식 투쟁과 문재인 대표의 동 참을 강조해 ‘갈등·불법성 강조 프레임’으로 보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각하는 피해 자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 수용을 쟁점화해 ‘특별법 수용 프레임’으로 틀 지은 것 을 알 수 있다.

5기는 단원고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일반인 유가족이 안산 합동 분향 소에서 영정을 철수한 시기이다. 왼쪽 행동하는 피해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유가족-경찰-폭행-사건’, ‘유가족-경찰-김현-폭행협외’, ‘유가족-대리기사-폭행-사건’ 으로 연결되어 이 사건이 쟁점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유가족은 다시 ‘불구속’, ‘폭행사건’,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그림 5. 5기: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 보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표 17. 5기: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 중심성 분석 결과

	행동하는 피해자				지각하는 피해자		
	매개중심성	인접중심성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인접중심성	위세중심성
유가족	1077.419	0.007	0.095	희생자	162.533	0.023	0.142
세월호	464.374	0.006	0.047	영정을	79.000	0.017	0.044
폭행	433.102	0.006	0.081	세월호	58.500	0.018	0.054
경찰	414.076	0.006	0.081	유가족	50.933	0.016	0.046
대학	378.000	0.005	0.017	일반인	47.733	0.019	0.078
캠퍼스	330.000	0.004	0.003	철수하기로	43.000	0.013	0.014
김현	244.317	0.005	0.054	다르게	24.300	0.016	0.078
철거	227.307	0.005	0.012	합동분향소	22.167	0.017	0.088
현수막	168.683	0.005	0.012	가족대책위	22.000	0.013	0.015
대리기사	120.531	0.006	0.068	편 가르기	22.000	0.012	0.013
폭력행위	117.000	0.005	0.030	단원고	15.967	0.017	0.066

‘병원’과 연결되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5>의 아래 그림은 일반인 유가족 보도 네트워크 분석 결과인데 ‘희생자-영정’, ‘희생자-일반인’, ‘희생자-영정을-철수하기로’로 연결되어 단원고 유가족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 시기 중심성 분석 결과를 보면 행동하는 피해자의 경우 ‘유가족’, ‘세월호’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폭행’, ‘경찰’ 순이었다. 유가족과 관련된 폭행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지각하는 희생자 보도에 대한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는 ‘희생자’, ‘영정’이 가장 높았다. 일반인 유가족이 분향소에서 영정을 뺀 것에 주목한 것을 알 수 있다.

5기 행동하는 피해자의 대리운전 폭행 사건이 쟁점화되어 ‘유가족 폭행 논란 프레임’으로 지각하는 피해자의 경우 희생자 영정을 안산 분향소에서 빼는 등 단원고 유가족과 완전히 다른 행보가 부각되어 ‘유가족 차별화 프레임’으로 보았다.

1기에서 5기까지 시기별로 보수 종편의 피해자 보도를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보수 종편이 일반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을 구분 지으며 단원고 유가족의 집회 참가, 농성, 폭력 행위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보도하는지 밝혔다.

## 4) 피해자 유형에 따른 언론의 피해자 프레임 비교

이 연구는 매체가시성 분석과 어절 분석,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언론이 행동하는 피해자와 지각하는 피해자를 어떻게 다르게 틀 짓는지 살펴보고 피해자 유형에 따라 유가족을 어떻게 명명하는지 프레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피해자의 의견 표출 정도와 행위의 합법성이 피해자 위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 관계를 분석했다.

〈표 18〉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기부터 5기까지 행동하는 피해자, 즉 세월호 유가족들은 합법성이 낮은 행위를 했으며 이들의 행위의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다. 초기에는 기자회견에서 시작해서 항의방문, 청와대 행진 및 반정부 시위를 거쳐 단식 농성 및 불법 점거, 대리기사 폭행까지 일탈 행위를 했다. 보수 종편은 1기부터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을 구분하려고 했으며 세월호 유가족을 반정부 세력, 불법 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틀 짓기 했다. 물론 세월호 유가족의 행위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과격해지고 폭력성을 띠는 등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언론에서는 지각하는 피해자와 행동하는 피해자를 계속 구분시켜 보도했다. ‘지각하는 피해자의 경우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을 수용했고, 결국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영정을 철수하는 등 세월호 유가족과 동일시되는 것을 경계했다. 합법적 지각하는 피해자를 보수 종편은 일탈적 행동하는 피해자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끊임없이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결과를 슈메이커와 리즈의 계층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조직의 정치적 성향, 뉴스 가치가 뉴스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은 힘이 약한 사람의 경우 합법적 행동보다 일탈 행위를 할 때 더 주목하는데 이 연구에서도 행동하는 피해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매체가시성이 지각하는 피해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수 종편은 일탈 행위를 하는 집단들의 행위의 원인보다는 결과에 주목하고 이들로 인한 피해를 강조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집회-폭력’, ‘집회-경찰-폭행’으로 연결되었고 반정부 세력과 연결시켜 부정적 일탈 집단으로 묘사했다. 이에 비해 합법적 행위를 하는 지각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동하는 유가족과 구분시켜 시청자들로 하여금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영향을 미쳤다. 즉,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반정부 투쟁 세력으로 낙인 했고 대조적으로 일반인 유가족은 순수한, 정치적 의도가 없는 희생자로 명명해 동정심을 유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할수록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 행위의 합법성이 낮을 경우 뉴스 가치 측면에서 더 주목을 받았다. 일탈 행동을 할수록 피해자는 언론에 의해 부정적으로 틀 짓기 되었으며 범법자, 반정부 집단과 동일시되었다.

표 18. 피해자 유형과 행위의 합법성에 따른 언론 프레임 비교

	일탈적 행동하는 피해자		합법적 지각하는 피해자	
	보도 프레임	행위의 합법성: 낮음	보도 프레임	행위의 합법성: 높음
1기	반정부 세력 프레임	KBS 항의 방문, 청와대 앞 행진 및 시위	순수 희생자 강조 프레임	집회 참석하지 않겠다
2기	집회 불법성 강조 프레임	· 촛불집회 참석 · 진보단체, 한총련, 민주노총 집회	세월호 희생자 분리 프레임	유가족 집회에 대한 의견 달라
3기	세월호 희생자 보상 프레임	-	-	-
4기	갈등·불법성 강조 프레임	단식 농성	특별법 수용 프레임	특별법 수용
5기	유가족 폭행 강조 프레임	대리기사 폭행	유가족 차별화 프레임	영정 철수

## 5. 결론

사건·사고의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현상에 주목한 이 연구는 보수 종편이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밝혔다. 언론 보도를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보수 종편의 피해자 보도에 피해자 위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세월호 피해자를 의견 표출 정도와 행위의 합법성을 기준으로 ‘합법적 행동하는 피해자’, ‘일탈적 행동하는 피해자’, ‘합법적 지각하는 피해자’, ‘일탈적 지각하는 피해자’로 유형화했다. 이 연구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전혀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의견을 적게 표출한다는 의미이다. 세월호 피해자의 행동을 중심으로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sup>6)</sup>을 ‘일탈적 행동하는 피해자’로, 일반인 유가족을 ‘합법적 행동하는 피해자’로 분류했다.

이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양적 측면에서는 매체가시성을, 질적 측면에서는 어절 분석과 단어의 현저성·중심성 네트워크 분석을 통

6) 연구 방법에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는 언론의 명명을 근거로 단원고 유가족을 ‘세월호 유가족’으로, 단원고 희생자를 제외한 유가족을 ‘일반인 유가족’으로 칭했다.

해 프레임을 밝혔다. 언론이 뉴스 가치 측면에서 ‘일탈적 행동하는 피해자’에 더 주목해 이들의 매체가시성이 ‘합법적 지각하는 피해자’보다 높을 것으로 보였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보수 종편의 경우 반정부 집단 및 진보 세력과 연대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고 보수 종편이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을 어떻게 다르게 프레임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탈적 행동하는 피해자의 매체가시성이 합법적 지각하는 피해자의 매체가시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단어의 현저성은 어절 분석을 통해 밝혔고 단어의 중심성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혔는데 시기별로 피해자 유형에 따라 단어의 현저성에 차이가 있었다. 단어의 현저성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탈적 행동하는 피해자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틀 짓는지 밝혔다. 시기별로 반정부 세력 프레임, 집회 불법성 강조 프레임, 갈등-불법성 강조 프레임, 유가족 폭행 강조 프레임이 나타났으며 이들의 집회나 농성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반정부 세력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일반인 유가족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적 행위에 동참하지 않고 뜻을 달리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순수 희생자 강조 프레임, 세월호 희생자 분리 프레임, 특별법 수용 프레임, 유가족 차별화 프레임과 같이 이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을 알 수 있다.

## 2) 결과 논의: 보수 종편의 피해자 차별

보수 종편의 세월호 피해자 보도에 대한 매체가시성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보수 종편의 정치적 성향, 미디어 관행 측면에서의 뉴스 가치는 보수 종편의 뉴스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원인이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피해자 보도에 ‘피해자 위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탈적 행동하는 피해자’의 매체가시성이 ‘합법적 지각하는 피해자’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보수 종편이 단지 상황을 ‘지각하는’ 피해자보다 상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피해자에게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청와대 행진’, ‘면담 요구’, ‘국회 방문’, ‘시위’ 등 다양한 정치적 행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의 입장 차이에 따라 ‘일반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으로 구분되었고 언론은 이들을 서로 다르게 명명했다. 이 연구는 언론의 명명(naming)과 유가족을 구분한 것이 이들에 대한 보도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자 위계’ 개념으로 접근했다.

세월호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저널리즘 측면에서 언론 보도의 선정성, 정확성에 주목한 반면, 이 연구는 종편 보도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적 프레임이 형성된 원인을 피해자의 행동에 따른 '위계'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피해자 위계가 존재하는 원인을 피해자의 행위에서 찾고 뉴스 가치의 관점에서 피해자 행동을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언론의 피해자 보도에서 '피해자 위계'가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연구는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라 시기를 구분해서 어절 분석, 매개중심성 분석을 실시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프레임을 밝힌 것은 새로운 시도로서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들이 내용 분석을 통해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언론에서 많이 언급할수록 시청자도 중요하게 인식할 것이라는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의 가정을 따라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어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단어의 현저성 분석 결과와 중심성 분석 결과를 보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보수 종편은 유가족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유가족 간의 입장 차이가 확인해진 이후 유가족을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으로 분리해서 보도했음을 알 수 있다. 실종자를 끝까지 찾고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사건 초기 유가족의 주장은 반정부 세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 퇴진'으로 변질되었고 전교조, 한총련, 민주노총 등 반정부·진보 세력이 집회, 시위에 참가하면서 '세월호 유가족 = 반정부 집단'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었다. 이 연구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요인을 보수 종편의 피해자 비난에서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의 행위가 적극성을 띠고, 시위 참가, 단식 농성, 연좌 농성 등 격해지면서 보수 종편에서 이들은 경찰과 대치하고, 무력시위를 하는 집단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인 유가족이 세월호 유가족과 입장이 다르다는 기사 회견이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것,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영정을 철수하겠다는 것 등 일반인 유가족의 차별화된 행동은 프레임 분석 결과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수 종편의 세월호 피해자 보도에 '피해자 위계'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어절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 언론은 세월호 피해자를 '일반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으로 다르게 명명했다. 합법적 영역에서 행동하고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보여주었고 농성, 단식, 반정부 의견을 표출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범법자로 명명하고 비난함으로써 이들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힘이 없는 집단의 일탈적 행동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이 사회의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는 선행 연구들이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줬다(Shoemaker & Resse, 1996).

이 연구는 언론이 정치적 입장이 다른 피해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지 밝힘으로서

힘이 있는 집단이나 국가, 사람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자주 등장한다는 ‘권력 관계’가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뉴스 가치 관점에서 피해자의 일탈적 행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러한 행동이 부정적 프레임으로 기사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사고의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로써 사회로부터 위로받고 동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수 종편은 피해자의 행위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보도했다. 물론, 피해자인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이 합법적 행동보다 일탈적 행동을 더 많이 했기에 뉴스 가치 측면에서 주목받았고 언론이 이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왜 일탈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표출하는가? 이에 대한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의 주장에 따르면, 권력이 없는 사람은 일탈 행동을 할 때만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은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시위, 농성 등 일탈적 행위를 했고 언론이 이러한 행동에 주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수 종편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차별화시켜 보도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Entmann, 1989).

언론이 사건·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는 것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사건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보도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묘사한다면,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에게 사건의 원인을 귀인한다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리어(Greer, 2007)의 의견처럼 사회 구성원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개인 차원에서 문제를 귀인할 경우 사회 차원에서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언론은 사건·사고의 원인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에 있지 않은지 여러 차원에서 사건에 접근하고 책임 소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일탈적 행동에 주목하는 한편,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프레임하는 것은 시청자의 현실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종편의 등장으로 사회 전체 수준에서 의견의 다양성이 담보되고 논의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보수 종편 시청자의 의견의 편향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의견의 양극화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들은 이 연구에서 밝힌

피해자 보도에 작용하는 ‘피해자 위계’를 경계하고 미디어에 의해 구성된 현실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는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서로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언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속함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언론 보도의 프레임을 밝히고 피해자의 행위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명함으로써 언론의 피해자 비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하여 향후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보수 종편의 보도만 분석 대상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연구에서 주목한 ‘피해자 위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피해자 위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언론의 성격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기에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신문사가 대주주라는 소유 구조가 동일한 채널A와 TV조선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매체에서도 ‘피해자 위계’가 존재한다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세월호 유가족과 정치적 입장이 같은 언론 매체의 보도도 분석한다면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피해자 위계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피해자 유형에 따른 피해자 위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언론 보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분석 대상으로 한다면 이 연구에서 주장한 이론적 논의를 일반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언론의 피해자 비난이 수용자의 현실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용자의 피해자 비난 심리에 변화를 주는지 수용자 조사 연구를 수반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김성중·박래군 (2014). <4.16 세월호 참사 그 이후 권력의 자화상>. 2014년 7월 10일 국회의 원회관 2층 제5간담회실 토론회.
- 김성재 (2003).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재난보도 방향. <방송통신연구>, 56권, 89-112.
- 박성희 (2009). 제 17대 대통령 후보 합동 토론 언어네트워크 분석: 북한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5권, 220-254.

- 윤태진 (2014). 방송사의 세월호 참사 보도: JTBC 뉴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문화/과학>, 79권, 192-212.
- 이단비 (2015). 재난보도의 정치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창길 (2010). 정권 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우선순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언어네트워크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4권 3호, 165-189.
- <중앙일보> (2014, 8, 1), 이규연의 시사각각 <죽은 유명인과 산 권은희>.
- 홍주현·윤해진 (2014).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연설문 네트워크 분석: 단어의 가시성 (visibility)과 단어 간 연결성(connectivity)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권 9호, 24-44.
- Altheide, D. L., Janisch, R., Korbin, L., Maratea, R., Neil, D., Reaves, J., & Deman, F. V. (2001). News construction of fear and victim: An exploration through triangulated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Qualitative Inquiry*, 7(3), 304-322.
- Blankespoor, E., & deHaan, E. (2014). CEO Visibility: Are Media Stars Born or Made?. Available at: [http://business.uic.edu/docs/default-source/accounting-docs/paper\\_blankespoor.pdf?sfvrsn=2](http://business.uic.edu/docs/default-source/accounting-docs/paper_blankespoor.pdf?sfvrsn=2)
- Capriotti, P. (2009). Economic and social roles of companies in the mass media: The impact media visibility has on businesses' being recognized as economic and social actors. *Business Society*, 48, 225-242.
- Entmann, M. R. (1989). How the media affect what people think: A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Journal of Politics*, 51(2), 347.
- \_\_\_\_\_ (2007). Framing bias: Media in the distribution of power.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163-173.
- Fairbairn, J., Bivens, R., & Dawson, M. (2013). *Sexual violence and social media: Building a framework for prevention*. Crime Prevention Ottawa: Ottawa, CN.
- Green, O., McColl, R., & Bader, A. D. (2012). A Fast Algorithm for Streaming Betweenness Centrality. Available at: <http://www.cc.gatech.edu/~ogreen3/docs/A%20Fast%20Algorithm%20For%20Streaming%20Betweenness%20Centrality.pdf>
- Grunig, J. E. (2005). *Situational theory of publics: In encyclopedia of public rel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Gorp, B. V. (2007). The constructionist approach to framing: Bringing culture back in. *Journal of Communication*, 60-79.
- Greer, C. (2007). News media, victims and crime. In P. Davies, P. Francis, C. Greer (Eds.), *Victims, Crime and Society* (pp. 21-49). London: SAGE.
- Hallin, D. (1986). *The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J., Kim, H. J., & Cameron G. T., (2009). Making nice may not matter: The interplay of crisis type, response type and crisis issue on perceived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Public Relations Review*, 35, 86-88.
- Pang, B., & Lee, L. (2007). Opinion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Foundations and Trends in Information Retrieval*, 2(1-2), 1-135.
- Richard, S. (2008). Industrial "Accidents" in Media. 1-8. Available at: <http://www.manchester.e>

- du/Academics/departments/sociologySocialWork/Sociology/documents/SheenaRichards.pdf
- Schmitz, A. (2012). Public Relations. Ch. Identifying and Prioritizing Stakeholders and Publics. Available at: <http://2012books.lardbucket.org/pdfs/public-relations/s08-identifying-and-prioritizing-s.pdf>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s: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sup>nd</sup> ed.). Longman Publishers: USA.
- Watt, R. G. (2007). From victim blaming to upstream action: Tackling the social determinants of oral health inequalities.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35, 1-11.

최초 투고일 2015년 8월 8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13일

논문 수정일 2015년 11월 26일

# Victim Blaming of Sewal-ferry Disaster on News in Conservative Total TV Programming : Categorization of Victims and Word Network Analysis

Ju-Hyun Hong

Assistant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Eun-Kyung Na

Assistant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phenomenon that victims of incidents are socially criticized by member of society. For exploring that how media frames victims of incident, this study analysed media text by word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This study categorized the types of victims based on the degree of opinion expression and legality of action. The media framed differently on the victims of Sewal-ship incident. The victim of doing the deviant action is framed into anti-government group frame, focusing on the illegality of assembly and focusing on the conflict and victim's violent frame. In comparison, legal acting victims are framed into pure victim's frame, acceptance of special act frame and differentiation of bereaved families frame. This study explores that conservative media covers victims of Sewal-ship incident differently and the hierarchy of victimization mediates the tone of media through network approach.

Keywords: coverage of events, victims of incident,  
hierarchy of victimization, frame, network analysis